



여시재 홈페이지(fcinst.org)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통제에 주력



9일 남중국해에서 군사훈련 도중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신화=뉴스시스]

세계질서는 관망, 지역질서는 간여  
성장률보다 경제구조개혁에 집중  
19차 당 대회 때 지도부 개편 주목

도시화, 빈곤 퇴치, 농업 발전, 사회보장제도 개혁 등이 중심 과제로 부상할 것이다. 특히 스모그로 초래된 사회적 이동과 탈출 러시는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에 자원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후룬연구원(胡潤研究院)에서 발표한 '중국투자이민백서'에 따르면 240명의 부호 대상 조사에서 60% 이상이 3년 내 해외에 주택을 마련하겠다고 응답했다. 해외로 나갈 수 없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 박탈감이 사회 갈등으로 확대되지 않기 위해서도 중국 당국로서는 '편하게 숨 쉬고 살 수 있는' 중국이 필요하다.

이러한 국내외의 여러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주체로서 당의 역량과 당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정치 방면에서의 노력이 2017년 광복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2016년 12월 26-27일에 열린 이른바 중앙

정치국 민주생활회에서 시 주석은 준차·조례와 관련해 당 조직과 당원들에게 6개 요구 사항을 특히 강조했다. 이 가운데 첫 번째로 요구한 내용이 다른 당중앙의 권위 수호다. 당중앙은 이미 18기 6중전회에서 시 주석을 당과 당중앙의 '핵심'으로 지위를 끌어올렸다. 2017년 시 주석은 이러한 '핵심' 지위를 기반으로 당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새로운 '개혁'의 담론을 선전해 나갈 것이다.

시 주석의 '핵심' 지위 획득이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2017년 하반기에 개최될 19차 당 대회의 지도부 개편과 관련되어 있다. 시 주석의 강화된 권력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이다. 그는 강화된 개인 권력을 충분히 활용해 자신의 의도대로 지도부 개편과 중장기적으로 22차 당 대회 후계구도까지도 포석을 마련할 수 있다. 18기 6중전회를 통해 시 주석은 이미 '핵심' 지위 획득으로 중요 정책과 인사의 최종 결정권을 자신이 가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19차 당 대회가 시진핑 개인 권력과 정치국 상무위원의 집단지도체제의 새로운 정책 모형을 만들어낼지 주목받고 있다.

2017년 당 대회와 마찬가지로 감찰체제 개혁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중국 공산당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감찰체제 개혁은 중국 공산당의 감찰 권력을 국가의 권력으로 전환하고 반부패 역량을 행정 부문을 따로 조직해 내는 일이다. 이를 통해 반부패 활동을 더욱 효과적이며 합법적이고 조직적으로 전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일본 미·일 동맹 유지 발전 낙관

# 대미외교, 가치 아닌 이익의 논리로

남기정 서울대일본연구소부교수

2017년은 '외교의 해'가 될 것이라고 일본의 주요 식자들은 전망한다. 이는 외교안보 과제는 산적해 있는 반면 경제는 상대적으로 성공했다는 평가에 기인한다. 우리가 우경화 프레임에 갇혀 아베 신조 정권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 정작 아베 총리가 힘써 온 것은 경제였다.

미쓰비시UFJ 리서치&컨설팅의 2017년 전망보고서는 지난 한 해 일본 경제가 담보 상태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과 관련해서도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미 대선 이후 엔저가 진행되고 있고, 기업의 생산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개인소비도 완만하게나마 늘 것이 예상된다. 2017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년 대비 1.0%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러한 전망은 트럼프 당선 이후 아베의 민첩한 실덕 노력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당선자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이탈을 선언한 직후의 분위기에서 보면 예상외라 할 수 있다. TPP 없이도 아베 노믹스의 성공 기초가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외교안보와 관련한 일본국제문제연구소의 보고서는 과거 평화담론의 영역에 머물렀던 일본의 안보담론을 현실주의 국제정치의 언어들로 바꿔 놓고 있다. 도쿄대 법학부 교수로 '신외교 이니셔티브'에도 관여하는 후지와라 기이치(藤原帰一) 교수는 일본이 미·일 동맹의 기본 구도를 유지하는 것을 목

표로 한다면 감당해야 할 부담이 적지 않음을 지적했다. 일본국제문제연구소의 연구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구보 후미야키(久保文明) 도쿄대 법학부 교수는 후지와라 교수와는 달리 미·일 관계에 대해 자신감을 내비치며 낙관적이다. 그는 트럼프가 미·일 안보조약을 알면 미·일 동맹이 미국에 가장 중요한 국익이며 권리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차분하게 2017년을 견디면 된다는 것이다.

일본중합연구소 이사장으로 있는 다나카 히토시(田中均) 또한 미·일 동맹의 유지·발전에 대해 낙관하면서 예산 증액보다는 역할 확대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능동적 대미외교를 펼칠 것을 주문하고 있다.

PHP연구소는 2017년에 예상되는 전략환경의 변화를 위험요인으로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가져오는 가능성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이 연구소의 보고서는 특히 '트럼프 시대의 미국'에 대처하는 다중적 대비태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대미 외교로 '가치'의 논리가 아니라 '이익'의 논리에서 미·일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설득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이제 미국 없이도, 아니 미국을 이끌며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재구축을 주도해 나가는 능동적 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주장도 일본의 주요 싱크탱크 보고서에서 나오고 있다.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경기 회복을 배경으로 미국을 대신하는 능동적 행위자로 동아시아 국제질서 재편을 주도해 나가는 모습, 2017년 일본인이 스스로에게 기대하는 모습이다.

# 갓춘 영국은 회원국 탈퇴

부담을 안게 됐다. 브렉시트 이후 EU는 공동체 차원의 군사본부 신설과 같은 공동안보정책 이니셔티브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2020년을 목표로 이미 계획된 EU 예산안에 따라 현재로서는 공동안보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예산확대 등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EU가 더 많은 재원을 공동방위 증진을 위해 투입하려는 의지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 출범과 브렉시트 협상의 과정은 여전히 유럽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브렉시트 협상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 요소들과 영국과 유럽 각국에 포

진하고 있는 유럽 회의론자들로 인해 양자간의 파트너십 형성도 순탄치는 않을 것이다. 유럽 방위를 선도하고 있는 프랑스와 독일은 EU 차원의 공동안보방위 강화 플랜을 지지한다.

그러나 동시에 두 국가는 이와는 다른 비전을 갖고 있으며 2017년 회원국 내부의 도전들(2017년 프랑스 대선과 독일 총선, 이주민 수의 급진적 증가와 테러리즘의 확산 등)로 인해 공동 방위에 대한 초국가 수준의 협력력이 쉽지 않은 전망이다. 따라서 새로운 공동안보방위정책(Common Security Defence Policy)의 성공 여부는 안보 분야

에서의 회원국 간 전략적 수렴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EU 회원국 수장들은 유럽의 극단주의 확산과 양극화에 대해 2017년에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당장 3월에 네덜란드 총선이 있다. 프랑스에서는 4-5월 대선, 6월 총선이 치러진다. 스페인 카탈루냐주의 분리독립 투표는 9월에 있을 전망이다. 10월에는 독일 총선이 예정돼 있다. 최근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네덜란드 우익 정당인 자유당 역시 2017년 3월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EU 탈퇴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프랑스에서는 반난민·반이슬람을 외치며 프렉시트(Frexit)를 공약으로 내건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이 공화당 대선 후보인 프랑수아 피용 전 총리와 경쟁 중이다. 피용은 경제적으로 신자유주의를 지지하며 반이슬람

과 EU 개혁을 지향한다. 극우파와 강경우파가 대결하는 양상이다.

브렉시트 결정과 트럼프 당선을 현실화시켰던 주요 원인인 불평등 심화와 경제 양극화, 기존 엘리트 정치에 대한 불신과 이로 인한 계층 간 갈등 확산, 세계화와 자유주의에 따른 피로감과 불만 등이 2017년에도 유럽 전역에서 지속될 전망이다.

포퓰리스트 정당의 약진과 극우민족주의 세력의 확장은 EU의 통합동력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유럽 전역의 이민공동체와의 갈등을 확산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유로존 재정위기 이후 다시 EU의 존립이 위협받는 한 해가 될 것이라는 견해가 팽배하다. 따라서 브렉시트의 여파가 다른 회원국들의 연쇄적인 EU 탈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EU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될 것이다.

## 2017년 주요 유럽 국가 선거 일정

\*는 선거일자 미정

3월 15일	네덜란드 총선
4월 23일	프랑스 대선 1차 투표
5월 7일	프랑스 대선 2차 결선투표
6월 11일	프랑스 총선 1차 투표
6월 18일	프랑스 총선 2차 투표
9월	스페인 카탈루냐주 분리독립 투표
10월 22일*	독일 총선
12월 31일*	체코 총선

자료: Election Guide 홈페이지 (2016년 12월 29일 기준)